

북한 민사시효제도의 특성*

이 은 정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 약 문

이 글은 우리 민법상 시효에 관한 규정과 비교하여 북한 민사시효제도의 특성을 고찰하고 그 차이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민사시효제도는 민법전 제4편 제2장(제259조 - 제271조)에 규정되어 있고, 종래의 체계에서 총칙, 소유법, 채무법, 상속법 4개의 편 중 총칙편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0년 민법전이 제정되면서 민사책임과 함께 제4편으로 그 위치가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현행 민법상 시효 규정이 제1편 일반제도에서 분리되어 민사책임과 함께 독립된 1개의 편을 이룬 것은 다른 입법례와 비교하면 체계상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책임성을 강조하는 북한 시효제도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다.

북한 민사시효제도의 특성은,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점, 시효제도의 목적으로 법인의 경제활동과 재정규율의 강화를 들고 있는 점, 소유형태에 따른 시효 적용의 차이, 시효의 의무적 적용, 권리주체에 따른 시효기간의 구분, 지나치게 짧은 시효기간, 시효기간의 연장사유 인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통하여, 북한 시효제도가 사회주의 법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우리 민법상 시효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재산이나 인신에 관한 엄중한 침해의 경우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점은 다른 사회주의 입법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데, 이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북한의 다른 법에서도 볼 수 있는 북한법만의 특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2007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계약이라도 일반계약분

* 이 논문은 2014. 8. 12. 중국 연변대에서 『중국과 북한의 민법 발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쟁 사건에는 시효 중단이 적용되도록 한 점은 계획경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북한경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북한법, 북한 민법, 북한 민사시효, 민사시효기간, 민사시효목적

【 目 次 】

I. 머리말	IV. 시효기간상의 특성
II. 개념과 목적상의 특성	1. 권리주체에 따른 시효기간의 구분
1. 취득시효의 불인정	2. 단기의 시효기간
2. 사회주의 법원칙과 시효제도의 목적	3. 예산제 기관, 기업소의 시효기간
III. 시효 적용상의 특성	4. 시효기간의 정지·중단·연장
1. 소유형태에 따른 시효 적용의 차이	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시효기간 계산
	V. 맺음말

I . 머리말

이 글은 우리 민법상 시효 규정과 비교하여 북한 민사시효제도의 특성을 고찰하고 그 차이점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¹⁾ 이러한 연구는 북한의 민법 더 나아가 북한의 법체계 전반을 이해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북한 민사시효제도는 민법전 제4편 제2장(북한 민법 제259조 - 제271조)에 규정되어 있고, 종래의 체계에서 총칙, 소유법, 채무법, 상속법 4개의 편 중 총칙편에 포함되어 있었으나,²⁾ 1990년 민법전이 제정되면서 민사책임과 함께 제4편으로 그 위치가 변경되

1) 필자는 10여년 전에 이미 북한 민사시효제도 전반에 대하여 발표한 바 있다(“북한 민사시효제도” 『민주법학』 통권 제17호, 민주법학연구회, 2000). 여기서는 발표 이후 개정된 내용과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민사시효제도의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민사시효 규정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앞의 “북한 민사시효제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신영호, “북한민법 40년과 그 동향”, 『북한법률행정논총』 제8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16면-22면

었다.³⁾ 이와 같이 현행 민법상 시효 규정이 제1편 일반제도에서 분리되어 민사책임과 함께 독립된 1개의 편을 이룬 것은 다른 입법례와 비교하면 체계상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⁴⁾ 이러한 특성은 책임성을 강조하는 북한 시효제도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다.⁵⁾

북한은 민법전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1956년 ‘시효에 관하여’⁶⁾라는 단행법령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령은 1961년 ‘시효에 관한 규정’⁷⁾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시효에 관한 규정’이 민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양 규정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하에서 북한 민사시효제도의 특성에 대하여 개념과 목적(Ⅱ), 시효 적용(Ⅲ), 시효 기간(Ⅳ)의 순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북한 민법은 사회주의 법체계에 속하며 중국과 구소련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민사시효제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중국과 구소련⁸⁾의 민법규정을 참고하기로 한다.

Ⅱ. 개념과 목적상의 특성

1. 취득시효의 불인정

우리 민법상의 시효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참조.

- 3) 민법은 제1편 일반제도, 제2편 소유권제도, 제3편 채권채무제도,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 4) 같은 사회주의법체계인 구소련과 중국도 시효제도를 민법의 총칙편에 규정하고 있다. 구소련의 경우,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민법전 제1편 총칙 제6장(제78조 - 제91조)에 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도 민법통칙 제7장(제135조 - 141조)에 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5) 법제처, 『북한법제개요(법제자료 제157집)』, 1991, 304면 참조.
- 6) 1956. 10. 5.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14개조로 이루어져 있다(정경모/최달근, 『북한법령집』, 대륙연구소, 제15편 사법, 1990, 679/2753 - 680/2754면 참조).
- 7) 1961. 7. 11.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1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앞의 『북한법령집』, 681/2755 - 683/2757면 참조).
- 8) 구소련의 경우는 소련이 해체되기 이전인 1964년 러시아민법을 참조하였다. 이하에서 구 러시아민법(1964년)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말하며,⁹⁾ 권리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취득시효와 권리소멸의 효과를 부여하는 소멸시효가 있다.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를 총칙편에(우리 민법 제162조 - 제184조), 취득시효를 물권편에(우리 민법 제245조 - 제248조)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북한 민법에서 시효제도는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이 넘도록 재산상 청구권을 실현하지 않을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¹⁰⁾ 취득시효는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 민사시효제도의 본질은 민사관계에서 사회주의적 법인이거나 공민들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재산상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지 않고 마치 그러한 권리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었을 경우 국가권력이 강제적으로 그 권리실현을 상실하도록 규제한 민법상 제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북한의 민사시효제도는 재산상청구권자의 권리소멸에 중점을 둔 소멸시효만을 전제하며, 소유권이 없는 점유자의 권리취득에 중점을 둔 취득시효와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¹¹⁾

북한 민법이 이처럼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 소유권제도의 본질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북한 이론은 취득시효의 인정은 타인의 재산을 장기간 점유하는 자에게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부동산 등록제도를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간주하는 북한 부동산 등록제도의 특성 등을 근거로 취득시효의 도입은 불합리하다고 보았다.¹²⁾

구러시아 민법(1964년)도 취득시효 규정은 없다. 중국도 1949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취득시효가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 제정된 물권법에도 취득시효는 명문화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 학계에서는 취득시효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다.¹³⁾

9) 지원림, 『민법 강의』 (제12판), 홍문사, 2014, 390면.

10) 『민법 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121면 ; 리학철,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본질”, 『김일성대학종합학보 력사 법학』 제44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8, 52면.

11) 리학철, 앞의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본질”, 55면 - 56면 참조.

12) 김재교, “공화국 민법전 초안(총칙편) 작성에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국가 관리에서 우리 당 군중 로선의 관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 법학 연구소, 과학원출판사, 1963, 135면 - 137면.

13) 이상욱, “중국 물권법상의 소유권 취득”, 『경희 법학』 제44권 제2호, 경희대학교, 2009, 125면 - 127면 참조.

2. 사회주의 법원칙과 시효제도의 목적

우리 민법상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전통적인 견해¹⁴⁾나 판례¹⁵⁾에 따르면, ① 사회질서의 유지, ② 입증곤란의 구제, ③ 권리 불행사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북한은 기관·기업소·단체들의 경제활동과 재정규율을 강화하며 공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효제도를 두고 있다.¹⁶⁾

이러한 시효제도의 목적에 대한 남북한의 차이는 민법의 기본원칙의 차이에서 유래한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민법전에 기본 원리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 또는 사적 자치, 사회적 형평의 고려, 사회적 조정의 원칙, 신뢰보호, 구체적 타당성 등을 민법의 기본 원리로 들고 있다.¹⁷⁾ 이에 비하여 북한은 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 ②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특별한 보호, ③ 민주주의중앙집권제, ④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개별적 기관, 기업소, 단체나 개인의 이익에 앞세우는 원칙, ⑤ 근로자들의 동지적 단결과 상호협조 보장, ⑥ 법적 규율 보장을 민법의 기본원칙으로 들고 있다.¹⁸⁾

또한 우리 민법이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 시효제도의 목적을 달리 보고 있지 않은 데 비하여, 북한은 민사관계가 기관·기업소·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가, 공민들 상호간(또는 공민을 일방으로 하는)에 발생하는가에 따라 시효제도의 목적에 차이를 두고 있다. 전자의 경우 시효제도의 목적은 기관·기업소·단체들의 경제활동과 재정규율 강화이며, 후자는 경제생활 안정이다. 이렇게 두 관계로 나누어 목적을 달리 보는 것은 양 관계에 대한 국가적 요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여기서 기본이 되는 것은 사회주의적 법인들 간의 민사관계에서 적용되는 시효제도이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수요가 대부분 사회주의적 경리를 통하여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⁹⁾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법인들의 경제활동 보호

14) 이연갑, 『주석민법』 총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487면.

15) 대법원 1976. 11. 6.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3. 31 91다32053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16) 앞의 『민법 1』, 123면. ;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239면.

17) 지원립, 앞의 책, 18면. ;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1, 65면 - 67면.

18) 앞의 『민법 1』, 27 - 34면 참조.

19) 리학철,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목적”, 『김일성대학종합학보 력사 법학』 제43권 제1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53면.

가 개인의 경제활동 보호 보다 우선시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체제상의 특성이 시효제도의 목적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가. 법인의 경제활동과 재정규율의 강화

민법의 시효제도는 소유물 또는 관리재산 반환청구를 비롯하여 각종 자재, 상품의 대금이나 봉사료의 청구, 그 밖에 여러 재산상 청구권을 제때에 신속히 행사하도록 자극하며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기관, 기업소, 단체들로 하여금 자기의 각종 재산상 청구권을 제 때에 신속히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주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유동자금²⁰⁾의 회전을 높이고 독립채산제를 강화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한다.²¹⁾ 따라서 북한 민법은 기관·기업소·단체들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이러한 요구로부터 민사시효제도를 민사관계에 이용되는 유동자금의 회전속도를 촉진하는 법적인 담보로 규제하고 이를 구체화 하고 있다.²²⁾

예컨대,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다음 자기의 민사상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한 자는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북한 민법 제 264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의 민사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²³⁾ 만일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에서 시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재정규율이 문란해지고 시효제도가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²⁴⁾ 구러시아 민법(1964년)도 사회주의기관 사이의 시효기간 만료 후의 의무의 이행은 소비에트연방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구러시아 민법 제89조 제2항).

나. 국민들의 경제생활 안정

시효제도의 또 다른 목적은 근로자들의 경제생활, 경제적 활동의 안정을 보장하는

20) 사회주의 사회에서 기관, 기업소들의 경영상의 특성은 ‘독립채산제’이다. 유동자금은, 독립채산제의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회주의 기업소의 생산과정과 끊임없이 순환하는 재산에 투하된 자금의 총체로서 고정재산에 투하된 고정자금에 대치되는 개념이다(이은정, 앞의 논문, 주 23) 참조). 독립채산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IV. 3.에서 설명함.

21) 앞의 『민법 1』, 123면.

22) 리학철, 앞의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목적”, 54면.

23) 리학철, 앞의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본질”, 56면.

24) 앞의 『민법 1』, 131면.

데 있다. 재산관계를 시간에 관계없이 보호하면 근로자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민사시효제도는 개별적 근로자들이 민사거래관계에서 오래 동안 방임해 두었던 재산상 청구권을 갑자기 행사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상 청구권이 상실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재산상 청구권을 제때에 행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경제생활에서 편의를 보장한다.²⁵⁾

Ⅲ. 시효 적용상의 특성

1. 소유형태에 따른 시효 적용의 차이

북한은 우리 소유제도와는 달리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나누며(북한 민법 제37조),²⁶⁾ 소유형태에 따라 시효의 적용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가. 개인소유권에 대한 시효 적용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우리 민법상 소유권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그 권리가 소멸될 수 없으며 따라서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우리 민법 제162조 제2항). 이에 비하여 북한은 소유권을 소멸시효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다만,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는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북한 민법 제259조 제2항). 또한 북한 문헌에서 민사 시효제도는 민사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이행청구권, 손해보

25) 리학철, 앞의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목적”, 57면.

26) 국가소유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로 마련한 재산,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국가기관, 기업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기관, 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밖에 국고에 넣기로 된 재산으로 이루어지며(북한 민법 제44조), ①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② 철도, 항공운수, 통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③ 각급 학교 및 중요 문화보건시설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다(북한 민법 제45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사회협동단체성원들이 들여놓은 재산, 사회협동단체의 자체 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사회협동단체의 생산물, 사회협동단체가 산 재산, 국가에서 사회협동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으로 이루어진다(북한 민법 제53조).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터발 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북한 민법 제58조).

상청구권²⁷⁾과 함께 비법점유물²⁸⁾반환청구권도 그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⁹⁾ 따라서 개인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⁰⁾

그런데 소유권(경영상관리권³¹⁾)자가 자기의 점유권, 이용권, 처분권을 제때에 행사하지 않은 행위에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기의 민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유관계에서 지니게 되는 소유권(경영상관리권)과 경제거래관계에서 지니게 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환, 대차, 임차와 같이 다른 법인이나 공민들 사이의 민사거래관계에 의하여 설정되는 점유권, 이용권, 처분권의 행사에서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²⁾

다만, 시효가 지난 재산은 임자 없는 재산이 되고(북한 민법 제263조), 임자 없는 물건은 국가소유로 되므로(북한 민법 제52조),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개인소유권을 침해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없다. 시효기간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공민들 사이의 채무도 국고에 들어가며, 시효기간이 지남으로써 기관, 기업소 상호간이나 국가기관, 기업소가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지불하지 않게 된 채무액도 해당기관에 회수된다. 이러한 채무액이 국고에 회수되는 것도 국가자금의 계획적 분배와 이용의 원칙으로부터 나온다.³³⁾

27) 북한법상 손해보상청구는 재산적 또는 인신적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그 손실에 해당하는 돈을 물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앞의 『민사법사전』, 403면 - 404면).

28) 비법점유물은 법이나 계약에 기초한 정당한 근거 없이 차지한 남의 물건이다. 점유자의 소유물로 될 수 없으며,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앞의 『민사법사전』, 315면). 비법침해행위는 우리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앞의 『민사법사전』, 312면).

29) 앞의 『민사법사전』, 423면.

30) 초기의 북한 이론 중에는 협동단체 소유권과 개인소유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는 민법상의 원칙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견해가 있다(앞의 “공화국 민법전 초안(총칙편) 작성에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137면 - 141면 참조).

31) 국가기관, 기업소들이 자기에게 위임된 국가재산을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밑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안에서 직접 점유, 이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앞의 『민사법사전』, 40면).

32) 리학철, 앞의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본질”, 54면.

33) 국가기관, 기업소들이 시효기간이 지난 채무액을 국고에 납부하는 것은 그것을 매달 종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납부기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매일 해당 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앞의 『민법 1』, 131면).

나.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시효 부적용

국가소유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당사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 규정에는 없지만 북한 이론은 국가소유재산 뿐만 아니라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당사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³⁴⁾

따라서 국가기관, 기업소는 시간적 요인에 구애됨이 없이 어느 때나 자기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고, 상대방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국가 기관, 기업소가 제기하는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은 민법 제정이전 북한정권 초기부터 인정된 것으로³⁵⁾ 민사관계 전반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특별한 보호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한다. 사회주의경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보장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경제이기 때문이다.³⁶⁾ 그런데 설령 국가 기관, 기업소의 소유물 반환 청구에 시효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는 국가 재산을 비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아무리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도 점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 재산에 시효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³⁷⁾ 구러시아 민법(1964년)도 집단농장, 기타 협동기관, 공공기관 또는 국민의 불법적 소유로부터 국가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청구에는 시효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러시아 민법 제90조)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국가 기관, 기업소가 사회협동단체나 개별적 공민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소유물 반환청구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국가 기관, 기업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산반환청구권에는 비록 국가 소유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는 양 당사자 재산 모두 국가소유재산으로서 어느 일방을 특별히 더 보호하여 줄 근거가 없으며,³⁸⁾ 침해된 재산관계의 조속한 회복에 자극을 주게 되어 계

34) 리학철, 앞의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본질”, 54면.

35) “공화국 민법전(초안) 중 총칙과 소유권법편의 몇가지 문제”, 『민주사법』 제6호, 사법성, 1959, 26면.

36) 리학철, 앞의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본질”, 55면.

37) 서창섭, “공화국 민법은 사회주의 소유 보호의 유력한 수단”, 『공화국 민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119면 - 120면.

38) 앞의 “공화국 민법은 사회주의 소유 보호의 유력한 수단”, 120면 - 121면 참조.

획과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사업에 유리하고³⁹⁾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특성에 맞게 물질적인 자극을 배합하여 경제관리와 경영활동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⁴⁰⁾

2. 민사시효의 의무적 적용

우리 민법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우리 민법 제162조 내지 제164조), ‘완성한다’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에 의해 당사자가 시효소멸을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⁴¹⁾ 이에 비하여 북한은 민사상권리의 실현을 보장받기 위한 재판이나 중재의 제기는 민사시효기간 안에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재판, 중재절차에 의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지 못한다(북한 민법 제259조). 즉, 우리 민법과는 달리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가 민사시효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아도 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북한 민법 제268조). 시효기간이 경과한 청구권에 대하여 소송이나 중재를 접수한 재판소나 중재기관은 제기된 재산상 청구권을 심리하면서 시효기간의 경과여부를 확인하고 시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해당 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를 거부한다.⁴²⁾ 재판소나 중재기관은 비록 당사자들이 시효의 적용을 거절하여도 의무적으로 시효를 적용하여야 하며 시효를 적용해 줄 것을 제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하여야 한다. 적용하여야 할 시효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해당 판결의 취소사유가 된다.⁴³⁾

이와 같은 시효적용의 의무성은 위에서 기술한 민사시효제도의 목적 자체에서 비롯

39) 앞의 “공화국 민법은 사회주의 소유 보호의 유력한 수단”, 121면.

40) 앞의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본질”, 55면.

41)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실체법상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와 실체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라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견해는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는 것만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견해(절대적 소멸설)와 시효기간 경과 외에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비로소 권리가 소멸한다는 견해(상대적 소멸설)가 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에 의해 당사자가 시효소멸을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소송에 관한 양 견해의 차이는 없다. 판례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를 시효의 이익을 직접 받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이연갑, 앞의 책, 541면 - 545면 참조).

42) 앞의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목적”, 55면.

43) 앞의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본질”, 56면.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⁴⁴⁾ 또한 이러한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다루는 민사관계에 있어서도 국가와 재판기관의 공민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⁴⁵⁾ 구러시아 민법(1964년)도 소송시효의 의무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구러시아 민법 제82조). 북한 이론은 판사가 제기된 재산상 분쟁사건을 재판하면서 ‘시효의 채용’(시효의 원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시효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부르쥔아 사회의 시효제도를 반동적 본질과 반인민적 성격의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⁴⁶⁾

그런데 같은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은 2008. 9. 1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사건 심리에서 소멸시효를 적용할 약간의 규정에 관한 의견’ 제3조에서 “평등한 민사주체의 의사자치 및 사적 권리에 대한 자유처분원칙, 그리고 소멸시효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석명하거나 직권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재판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⁴⁷⁾ 우리 법원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법원에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이를 판단한다. 소멸시효의 적용에 관한 중국과 북한의 이와 같은 차이는 경제체제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북한의 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시효의 의무적 적용 규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엄중한 침해에 대한 시효 부적용

북한 민법 제248조 제1항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인신침해의 손해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1999년 개정을 통하여 동법 동조 제2항을 신설하고 “사람의 존엄과 명예를 심히 훼손시켜 그의 신체와 인격에 지울수 없는 손상을 남긴자는 시효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상법((2001. 8. 22 제정) 제53조도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당한 자는 시효기간안에 손해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44) 앞의 『민법 1』, 125면.

45) 손희두, 『북한의 손해보상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78면.

46) 앞의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본질”, 56면.

47) 김주, “중국의 소멸시효제도”, 법률신문 2008. 10. 2 참조(<http://m.lawtimes.co.kr> 최종방문일 2014. 10. 15.).

재산이나 인신을 엄중히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에 관계없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시효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와 같이 시효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⁴⁸⁾

또한 북한의 경우 시효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어느 정도가 ‘심히’ 훼손한 것이며 인격에 ‘지울수 없는’ 손상인지, 또한 ‘엄중한’⁴⁹⁾ 침해인지 모호하여 적절한 입법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집단주의를 원칙으로 하고(북한 헌법 제63조) 반국가 범죄를 특히 엄중한 범죄로 보고 있는⁵⁰⁾ 북한 당국의 관점을 고려할 때 사회주의적 공적 재산에 관한 손해보상관계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우선할 것으로⁵¹⁾ 이러한 시효적용에 대한 예외 규정은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 보다 우선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IV. 시효기간상의 특성

1. 권리주체에 따른 시효기간의 구분

우리 민법은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비하여 북한 민법은 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와 청구의 성격에 따라 시효기간을 구분하고 있다. 시효기간은 우선 일반시효기간과 개별시효기간이 있다. 개별시효기간은 여러 재산상 청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정한 시효기간이며, 일반시효기간은 그 밖의 모든 청구에 대하여 다 같이 적용되는 시효기간이다. 일반시효기간은 다시

48) 다만, 우리 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채권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2526 판결등 참조).

49) ‘엄중하다’는 의미를 북한 사전에는 ‘잘못이나 그밖의 부정적인 현상의 정도가 몹시 심하고 중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조선말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1556면). 북한은 2008년 개정전 형법에서 엄중성정도(구 형법 제7조), 행정처벌법에서 엄중경고처벌(행정처벌법 제14조 1호) 등 다른 법에서도 ‘엄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50) 리정철, “법적책임추궁의 일반조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역사·법률』 제60권 제1호, 2014, 113면.

51) 손희두, 앞의 논문, 79면.

기관, 기업소, 단체 상호간에 적용되는 일반시효기간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 또는 공민 상호간의 청구에 적용되는 일반시효기간이 있다.

가. 공민이 당사자인 경우의 시효기간

개인 상호간 또는 개인과 국가 기관, 기업소, 단체 상호간의 청구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시효기간은 1년이다(민법 제260조).⁵²⁾ 개별시효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하여 구 러시아 민법(1964년)은 단기소송시효가 법인이나 공민 모두에게 적용되며(구 러시아 민법 제79조), 중국은 공민과 법인에 따른 시효기간의 차이가 없다(중국 민법통칙 제135조, 제136조)

나. 법인간의 시효기간

(1) 일반시효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 상호간의 일반시효기간은 6개월이다(북한 민법 제261조 2호).⁵³⁾ 특히 법인들 간의 채권행사기간을 단기로 한 것은 사회주의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거래에서 재정규율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⁵⁴⁾

(2) 개별시효기간

제품의 대금청구와 보증금 반환청구, 공급한 제품의 규격·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부패변질·수량부족·그 밖의 계약조건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청구와 위약금, 연체료의 지불청구 및 운수·채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한 개별시효기간은 3개월이다(북한 민법 제261조 2호).

대외민사거래와 관련한 청구에 대한 개별시효기간은 조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2년이다(북한 민법 제261조 3호). 1999년 개정 전에는 대외민사거래에서 시효기간을 협의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외국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수입품의 사고와 관련한 보상청

52) 1956년 ‘시효에 관하여’에 규정된 시효기간은 3년(동 규정 제3조)으로 현행 시효기간 보다 길었다. 시효에 관한 규정(1961년)은 1년으로(동 규정 제3조) 현행법과 그 기간이 동일하다.

53) 1956년 ‘시효에 관하여’에 규정된 시효기간은 1년(동 규정 제2조)으로 현행 시효기간 보다 길었다. 시효에 관한 규정(1961년)은 6개월로(동 규정 제2조 2호) 현행법과 그 기간이 동일하다.

54) 윤종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민법건설의 강령적지침”, 『김일성대학종합학보력사 법률』 제58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2. 4.

구, 국제연락운수 및 국제통신과 관련한 청구'에 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그 적용범위가 대외민사거래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시효기간을 2년으로 확정하여 북한 내의 시효기간보다 그 기간이 늘어난 점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⁵⁵⁾

또한 북한은 대외경제계약법에서 대외경제계약의 손해보상청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대외경제계약상의 손해보상청구는 계약에서 정한 손해보상청구기간에 하며, 계약에 손해보상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르며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시효기간에 할 수 있다(북한 대외경제계약법 제35조). 따라서 대외경제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 → 조약 → 북한 민법의 차례로 그 청구기간을 정하며, 민사시효기간을 적용할 경우에는 2년이 될 것이다.⁵⁶⁾ 금강산관광지구 보험규정(동 규정 제26조),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동 규정 제25조),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보험규정(동 규정 제24조)에서는 보험보상청구 시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 역시 2년이다.

이러한 북한 민법상 시효기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남북한 경제교류시 계약을 통하여 별도의 시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다.

2. 단기의 시효기간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우리 민법 제162조), 단기소멸시효는 3년, 1년이다(우리 민법 제163조, 제164조). 또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이다(우리 민법 제165조). 이에 비하여 북한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장 긴 시효기간도 2년으로 그 기간이 아주 단기적인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시효기간은 시효제도 자체의 목적, 지리적 조건, 교통 및 통신 연락 수단, 인민경제발전의 요구, 청구권의 성격 등에 맞게 설정되었다고 한다.⁵⁷⁾ 이러한 단기의 시효기간은 북한뿐만 아니라 책임성이 강조되는 사회주의법상 시효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구러시아 민법(1964년)의 경우 일반 소송시효기간이 3년(동법

55) 개정전 북한 민법 제261조 3. 외국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수입품의 사고와 관련한 보상청구, 국제연락운수 및 국제통신과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해당 협정에 의한 기간

56) 이은정, 앞의 논문, 382면 참조.

57) 앞의 『민사법 사전』, 239면.

제78조), 단기 시효기간이 6개월, 1년(구러시아 민법 제79조, 제365조, 제384조)이며, 중국 민법총칙에도 일반 소송시효가 2년(중국 민법통칙 제135조), 특수소송시효가 1년(중국 민법통칙 제136조)이다.

이처럼 시효기간이 단기간인 것에 대하여, 민사시효제도가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신속한 수행을 독려하는 제재수단으로서 사실상 개인재산의 국유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⁵⁸⁾ 우리의 제척기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한 견해⁵⁹⁾도 있다. 다만, 북한 민사시효는 시효의 중단, 정지 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척기간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예산제 기관, 기업소의 시효기간

가. 예산제 기관, 기업소의 의의

예산제 기관, 기업소는 자체로 돈을 벌지 못하고 국가 예산에서 받아쓰기만 하는 기관, 기업소이다. 독립채산제 기관, 기업소와 구별되는 기관이다. 독립채산제 기관, 기업소는 국가의 중앙 집권적 지도 밑에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면서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일정한 이익을 주는 원칙에서 계획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전인민적 소유의 경영단위이다. 북한에서 생산 및 건설 기업소를 비롯하여 자체의 경영 활동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있는 단위에서는 예외없이 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 독립채산제 기관, 기업소들에는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들뿐만 아니라 생산을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들과 도시경영, 문화예술, 편의봉사, 수매기관, 기업소들도 포함된다.⁶⁰⁾

나. 예산제 기관, 기업소의 청구권에 대한 민사시효기간

예산제 기관, 기업소의 청구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그 청구권이 발생한 예산연도가 지나면 시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는데(북한 민법 제262조), 이는 국가의 예산자금공급절차와 관련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⁶¹⁾ 예산제 기관

58) 김항중, 『남한과 북한의 민법의 비교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4, 124면 참조.

59) 앞의 『북한법제개요』, 303면 .

60) 『재정금융사전』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1995, 383면.

상호간의 민사상 권리뿐만 아니라 예산제 기관과 독립채산제 기관, 기업소 간의 민사상 권리에 대해서도 그 권리가 실현되어야 할 예산년도가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²⁾

개정 이전에는⁶³⁾ 예산제 ‘국가’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은 국가기관 상호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⁶⁴⁾ 1999년 개정으로 국가기관이 ‘기관’으로 수정되었으므로 국가기관⁶⁵⁾이 아닌 예산제 기관⁶⁶⁾에도 이 규정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채권’⁶⁷⁾이 ‘청구’⁶⁸⁾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규정의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시효기간의 정지 · 중단 · 연장

가. 시효기간의 연장 규정 명시

우리 민법은 시효기간의 정지(우리 민법 제179조 - 제182조), 중단(우리 민법 제168조, 제169조, 제178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 규정은 없다. 이에 비하여 북한 민법은 민사시효기간의 정지(북한 민법 제265조), 중단(북한 민법 제266조) 이외에 민사시효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청구권을 가진 자가 민사시효기간안에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데 대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효기간을 연장하여 줄수 있다(북한 민법 제267조).

61) 앞의 『민법 1』, 127면.

62) 앞의 “공화국 민법전(초안) 중 총칙과 소유권법편의 몇가지 문제”, 26면 참조.

63) 1999년 개정 전에는 “예산제 국가기관, 기업소의 채권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이 발생한 예산년도가 지나면 시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64) 앞의 『민법 1』, 127면.

65) 국가기관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며 국가 활동의 일정한 분야를 담당하는 수행기관이다(『광명백과사전』 3 정치·법, 백과사전출판사, 2009, 146면).

66) 기관이란 사회생활의 이러저러한 영역에서 일정한 기구정원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체이다(앞의 『조선말사전』, 191면).

67) 채권은 재산과 결부된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앞의 『민사법사전』, 631면).

68) 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률적 주장 또는 제기이다(앞의 『민사법사전』, 619면).

이와 같은 시효의 연장제도는 우리 민법에는 없는 제도로서 사회주의법의 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도 인민법원은 특수사정이 있을 경우 소송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중국 민법통칙 제137조).

(1) 시효연장의 의의

시효기간의 연장은 시효기간이 지나가도록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 이미 경과한 기간만큼 연장해 줌으로써 시효기간이 지나가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재산상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소송 또는 중재의 제기는 법이 정하고 있는 정지사유 이외의 사유들에 의해서도 장애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효의 연장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본질상 시효의 정지제도를 보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⁶⁹⁾

그러나 법이 정한 시효기간은 강행적 성질의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그것을 자의로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없으며, 이러한 합의는 모두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원칙은 시효제도의 목적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⁷⁰⁾

(2) 연장사유

북한 민법은 시효기간의 연장사유로 ‘불가피한 이유’를 들고 있다. ‘불가피한 이유’는 ‘어찌할 수 없는 사유’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사유이다. 예컨대, 소송장을 만들어가지고 재판소를 찾아 떠난 공민이 타고 가던 버스가 고장이 나서 시효기간 보다 2-3일 늦게 재판소에 도착한 경우는 불가피한 이유가 된다고 한다.⁷¹⁾ 또한 소유권침해와 관련하여 소유물반환청구를 제기하는데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불법가해와 관련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하는데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사정도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시효의 연장사유는 반드시 불가피한 사정이라야 하며 단순한 ‘딱한 사정’은 연장사유가 되지 못한다.⁷²⁾

시효의 정지나 시효의 중단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되거나 중단되

69) 앞의 『민법 1』, 130면.

70) 앞의 『민법 1』, 127면.

71) 앞의 『민사법사전』, 424면.

72) 앞의 『민법 1』, 130면.

지만, 시효의 연장은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시효연장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가 제기되어도 이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청구접수를 거절하면 청구권자는 시효연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시효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⁷³⁾

나. 법인 간의 일반계약에 대한 시효중단 인정

2007년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 상호간에는 채무의 승인이 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못하였다. 즉,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 또는 공민사이의 채무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만 민사시효기간의 계산은 중단되었고(개정전 북한 민법 제266조 3호)⁷⁴⁾, 이는 그들 상호간의 청구에 대하여 시효제도를 두는 목적으로부터 연유한다고 해석하였다.⁷⁵⁾

그러나 현행법상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일반계약⁷⁶⁾ 분쟁사건에서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였을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북한 민법 제266조 3호).⁷⁷⁾ 이는 일반계약의 경우에는 법인 사이의 청구에 시효의 중단을 인정하더라도 ‘법인의 경제활동과 재정규율의 강화’라는 시효제도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인간의 계획에 기초한 계약⁷⁸⁾은 채무자가 채무를 승

73) 앞의 『민사법사전』, 424면.

74) 개정전 민법 제266조(민사시효기간의 중단) 다음과 같은 경우 민사시효기간의 계산은 중단된다.

1. 채권자가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였을 경우
2. 은행기관을 통한 지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확인하였을 경우
3.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 또는 공민사이의 채무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였을 경우 시효기간이 중단되면 그때부터 시효기간을 새롭게 계산된다.

75) 앞의 『민법 1』, 129면.

76) 북한 민법상 계약은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과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으로 나뉜다.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은 ‘일반계약’이라고도 하며 계획과제에 기초함이 없이 당사자 쌍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된다. 일반계약에는 팔고사기계약, 작업봉사계약, 보관계약, 빌리기계약, 위탁계약, 려객수송계약, 저금계약, 보험계약, 위임계약, 꾸기계약, 은행대부계약, 합동작업계약이 있다(북한 민법 제146조 - 제234조 참조).

77) 2007년 민법 개정으로 동법 제266조 3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민법 제266조 3. 공민호상간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 혹은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계획에 기초 하지 않는 일반계약분쟁사건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였을 경우

78)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며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맺는다(북한 민법 제101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에는 자재공급계약, 상품공

인하여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시효기간 계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데 비하여(우리 민법 제111조 제1항) 북한은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소송장이나 중재청구서를 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늦게 도착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기간 내에 중재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⁷⁹⁾

V. 맺음말

이상에서 북한 민사시효제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북한 민사시효제도는,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점, 시효제도의 목적으로 법인의 경제활동과 재정규율의 강화를 들고 있는 점, 소유형태에 따른 시효 적용의 차이, 시효의 의무적 적용, 권리주체에 따른 시효기간의 구분, 지나치게 짧은 시효기간, 시효기간의 연장사유 인정 등의 특성이 있다. 이는 사회주의 법원칙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우리 민법상 시효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북한 민법상의 민사시효제도는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특구 관련 법률에서 북한 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나 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한 경제교류의 경우 북한 당사자와의 계약 체결을 통하여 별도의 시효규정을 명시하고 북한 민법상 민사시효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북한은 외국투자의 장애가 될 수 있는 민법상의 시효제도를 적어도 경제특구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 민사시효제도의 특성 중의 하나는 재산이나 인신에 관한 엄중한 침해의 경우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의 관

급계약, 농업생산물수매계약, 기본건설시공계약, 화물수송계약이 있다(북한 민법 제105조 - 제145조).

79) 앞의 『민법 1』 128면 ; 앞의 『민사법 사전』 423면.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러한 입법태도는 다른 사회주의 입법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북한법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에서도 법제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법정치’라는 용어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에서의 ‘법의 위상’은 우리 사회와는 아직 많은 차이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으로 2007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계약이라도 일반계약분쟁 사건에는 시효 중단이 적용되도록 한 점은 계획경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북한경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논문접수 : 2014. 10. 16. / 심사개시 : 2014. 10. 17. / 게재확정 : 2014. 11. 6.)

참 고 문 헌

- 『광명백과사전 3(정치, 법)』, 백과사전출판사, 2009.
- 『민법 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 『재정금융사전』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1995
- 『조선말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 “공화국 민법전(초안) 중 총칙과 소유권법편의 몇가지 문제”, 『민주사법』 제6호, 사법성, 1959
- 김재교, “공화국 민법전 초안(총칙편) 작성에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국가 관리에서 우리 당 군중 로선의 관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 법학 연구소, 과학원 출판사, 1963
- 리경철, “법적책임추궁의 일반조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률』 제60권 제1호, 2014
- 리학철,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목적”, 『김일성대학종합학보 력사 법학』 제43권 제1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 리학철,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본질”, 『김일성대학종합학보 력사 법학』 제44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8
- 서창섭, “공화국 민법은 사회주의 소유 보호의 유력한 수단”, 『공화국 민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 윤종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민법건설의 강령적지침”, 『김일성대학종합학보 력사 법률』 제58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2
- 김향중, 『남한과 북한의 민법의 비교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4
- 법제처, 『북한법제개요(법제자료 제157집)』, 1991
-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1

손희두, 『북한의 손해보상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이연갑, 『주석민법』 총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정경모/최달곤, 『북한법령집』, 대륙연구소, 1990

지원림, 『민법강의』 (제12판), 홍문사, 2014

김 주, “중국의 소멸시효제도”, 법률신문 2008. 10. 2

신영호, “북한민법 40년과 그 동향”, 『북한법률행정논총』 제8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이상욱, “중국 물권법상의 소유권 취득”, 『경희 법학』 제44권 제2호, 경희대학교, 2009

이은정, “북한 민사시효제도”, 『민주법학』 통권 제17호, 민주법학연구회, 2000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vil Prescription System of North Korea

Lee, Eun-Jung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compare the civil prescription system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North Korean Civil Prescription System is regulated according to the Civil Law of North Korea (Part IV, Chapter 4, Article 259 & Article 271). It was included in the Civil Law of North Korea, under the Section of General Provisions among its four sections : General Provisions, provisions on Ownership, provisions on Claim and Obligation, and provisions on Inheritance. With the enactment of the Civil Code in 1990 it was switched from General Provisions to Part 4 along with Civil Responsibility. The fact that the current regulations for the civil prescription system is an independent section with Civil Responsibility separated from Part 1 of the general institution is unique, compared with other legislation systems. It may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 *raison d'être* of North Korean civil prescription system giving emphasis on responsibility

North Korea's civil prescription system faithfully follows the socialist legal principles: it does not recognize acquisitive prescription; it applies prescriptions differently according to legal subjects; it also makes application of the prescription obligatory; the period of the prescription is incredibly short; one of its main purpose is to help reinforce corporate bodies' economic activities and financial discipline.

However, there are uniqu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legal system. For instance, there is a provision of not applying the prescription in case of severe damage to properties and human body. Such regulations cannot be found in other similar legal systems of socialist states, such as Chin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However, such ambiguous regulations without clear standards are not desirable in terms of the stability of law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revision of its Civil Law made it possible to suspend the prescription in cases of general contract dispute of a contract between the institution, enterprise, and organization, which may be viewed as an indicator of certain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s it breaks away from planned economy.

Key Words

North Korean Law, the Civil Law of North Korea, Civil Prescription of North Korea, the Period of Civil Prescription, the Purpose of Civil Prescription